

제3장

현행 법령 평가사례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 1 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공정·투명성 제고

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규정 마련
2.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 합리성 제고
3.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 합리성 제고
4. 하도급계약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 통제장치 마련

01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규정 마련

■ 평가대상

- ① 건설산업기본법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 ③ 전기공사업법
④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규정 없음”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 황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내역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승낙을 받거나, 계약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
 - 시공자가(수급인 및 하수급인) 발주기관에 통보하는 공사대장 등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저가 하도급계약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 가능
- 하도급계약 자료는 계약당사자들(발주기관, 수급인, 하수급인)에게만 열람이 가능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건설공사 계약과정의 부패와 부조리 발생 예방 및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문 제 점

- 현재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음
- 하도급계약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계약당사자(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들만 서로 공유하고 있어 하도급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투명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이중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부패발생 고리를 형성
- 재정 정보 등에 대한 일반에 비공개는 국민 감시활동을 억제시켜 부패 유발 요인 제공과 공생발전을 저해
 - 발주기관은 재정 정보의 공표,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 감시를 통해 효율적 예산 집행을 검증 받아야 하나, 하도급계약 자료 비공개로 계약당사자들 간의 부패발생 소지 제공
- 하도급계약 자료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발주기관의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행정소송 제기로 소송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소송 패소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

개선방안

- 하도급계약 자료,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마련
 - 「건산법」 등 5개 하도급사업법령에 공개 관련 규정 신설

예 시

| 현 행 | 개선권고 |
|-----------------------------------|--|
| <p>〈신설〉 (5개 하도급 사업법률)</p> | <p>제〇〇조(하도급공사 계약 자료의 공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명 2. 공사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내역, 하도급률) 7. 선금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방법(지급주기, 현금지급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여부 10. 하자담보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미교부 사유 기재)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14. 그 밖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02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 합리성 제고

■ 평가대상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 5. (생략)
6.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7. ~ 1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동 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⑪ (생략)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 5. (생략)

6.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7. ~ 21.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⑪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계약법령에서 「건설법」 상의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법」의 하도급계약 금지·제한·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13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적격심사 낙찰제(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는 낙찰자 결정전 미리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을 심사하여 점수를 배점
(10~14점)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가 계획서를 불이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국가·지방계약법령)
 - 최저가 낙찰제(300억 이상) 건설공사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자로부터(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건설법」)

문제점

-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 및 하도급계획서 불이행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계약법령에서 제외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한 형평 제재가 미흡한 실정

〈 하도급계약 의무 등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사항 〉

| 위반 유형 제재 유형 | 일괄 하도급 | 미등록 자에게 하도급 |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 재하도급 금지위반 하도급 | 불리한 조건으로 하도급 | 하도급 계약자료 거짓 · 미통보 | 하도급 계획서 불이행 |
|------------------|--|--------------------------------------|--------------------------------------|--------------------------------------|---|---|---------------|
| 영업정지 등 (건산법) | 영업정지 (6~8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6~30%) |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6~24%) |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4~16%) | 영업정지 (4개월) 과징금 (도급액의 4~16%)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3개월) 과징금 (2~3천만원) | 영업정지 (3~4개월) 과징금 (4천만원) 과태료 (1~4백만원) | 과태료 (3백만원) |
| 입찰참가 제한 (계약법) | 7~13개월 | 7~9개월 | 5~7개월 | 3~5개월 | 3~5개월 | 규정없음 | 규정없음 |

- 또한, 하수급인 등의 보호를 위해 공사규모에 따라 계약법과 「건산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제도가 개별 법령에서 계획 불이행자에 대한 서로 다른 수준의 제재는 제도의 실효성 저하

※ 하도급관리계획서(계약법) : 적격심사 낙찰제(50억 이상 ~300억 미만) 제출 제도
하도급계획서(건산법) : 최저가 낙찰제(300억원 이상) 제출 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계약 질서 위반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제재 규정 마련
- 「건산법」 규정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와 ‘하도급계획서’ 불이행자에 대하여도 계약법령에서 하도급계약 질서를 문란 시키는 중대 위반행위로 분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예 시

| 현행 | 개정(안)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생략) 1. (생략)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

| 현행 | 개정(안) |
|---|--|
| <p>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p> <p>3.~5. (생략)</p> <p>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신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p> <p>7.~18. (생략)</p> <p>〈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p> <p>① (생략)</p> <p>1. (생략)</p> <p>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p> <p>3.~5. (생략)</p> <p>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신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p> | <p>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자(거짓 통보에 한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p> <p>3.~5. (현행과 같음)</p> <p>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을 포함한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p> <p>7.~18. (현행과 같음)</p> <p>〈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자(거짓 통보에 한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p> <p>3.~5. (현행과 같음)</p> <p>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p> |

| 현 행 | 개 정(안) |
|--|--|
| <p>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 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p> <p>7.~18. (생략)</p> | <p>계획을 포함한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p> <p>7.~18. (현행과 같음)</p> |

03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규정 합리성 제고

■ 평가대상

- ① 건설산업기본법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 ③ 전기공사업법
④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 ⑤ 소방시설공사업법

▶ 건설산업기본법령

〈영업정지 등〉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1차 | | 2차 | | 3차 | |
|---------------------------------|-----------------|----------------|----------------|----------------|----------------|----------------|----------------|
| | | 영업 정지 기간 | 과징 금의 금액 | 영업 정지 기간 | 과징 금의 금액 | 영업 정지 기간 | 과징 금의 금액 |
| 마.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 82조 제1항 제4호 | 3개월 | 4천만원 | 4개월 | 4천만원 | 4개월 | 4천만원 |

〈과태료〉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 2차 | 3차이상 |
|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99조 제2호 | 1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 바.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 제4호 | 1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영업정지 등〉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처분기준 |
|---------------------------|-----------|----------|
| 9.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 법 제66조제9호 | 영업정지 3개월 |

〈과태료〉

하도급계약 위반 관련 부과규정 없음.

▶ 전기공사사업법령

〈영업정지 등〉

하도급계약 위반 관련 부과규정 없음.

〈과태료〉

|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5.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 제1항제5호 | 300만원 |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

〈영업정지 등〉

하도급계약 위반 관련 부과규정 없음.

〈과태료〉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1항제4호 | 100 |

▶ 소방시설공사사업법령

〈영업정지 등〉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 2차 | 3차 |
| 어.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 명령) | 영업 정지 1개월 | 등록 취소 |

〈과태료〉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1차 | 2차 | 3차이상 |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0조 제1항1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 황

- 건설공사 중 「건설법」 적용 대상 공사 이외의 4개(통신·전기·문화재·소방공사) 업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개별 하도급사업 법령에 따라 분리 시행되고 있음
 - 4개 업종은 개별하도급사업법령으로 「건설법」과 동일하게 하도급계약 관계(금지·제한·의무 등)를 규제·관리하고 있음
 -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로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적절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을 사전승인 하거나, 계약 이후 계약 자료를 통보하도록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문 제 점

- 「건설법」 등 5개 건설사업 법령에서 분야별로 하도급계약 관계 규정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두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 의무 위반행위 대한 행정처분은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하도급계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종에 중하게 또는 완화해서 처분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제재 규정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

-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개별하도급사업법령」에서 서로 다른 제재 수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져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저해
 -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위반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 허위성에 위법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제재처분은 불합리

〈 하도급계약 통보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

| 구 분 | 건 산 법 | 정보 통신 법 | 전기 사업 법 | 문화 재법 | 소방시설법 |
|-----------|----------------------------------|---------------|--------------------|--------------------|--|
| 거짓 통보자 | 영업정지(3~4 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과태료 (50~200만원) |
| 미통보자 | 과태료 (100~150만원) | 규정 없음 | 과태료 (300 만원) | 과태료 (100 만원) |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취소와 과태료 (50~200만원) |

- 하도급계약 자료 미통보는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타당성(저가 계약체결 및 공공사업 시공품질 확보 등) 검토를 발주기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하여 하도급계약 질서 문란과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

개선방안

- 「개별하도급사업법령」에서 하도급계약 의무 위반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규정 마련
 - 개별 법령에서 하도급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제재 규정이 없거나, 경미하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 받는 불이익보다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이 과도하여 하도급계약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 제재 규정 필요

① 제재 수단 → 제재 규정 일원화 (개별업종간 형평성 유지)

- 거짓 통보자 : 「영업정지」 처분
- 미 통보자 : 「과 태 료」 부과

② 제재 수준 → 상한선 제시 (업종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처별 자율 개선)

- ▶ 거짓 통보자 : 위반 횟수에 따라 4개월 이내 차등 처분
- ▶ 미 통보자 :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내 차등 부과

- ▶ 거짓 통보자 → 위반 횟수에 따라 4개월 이내, 「영업정지」 차등 처분
- ▶ 미 통보자 →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내, 「과태료」 차등 부과

예 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현 행 | 개 정(안) |
|--|---|
| <p>〈법률〉</p> <p>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p> <p>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20. (생략)</p> <p>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p> <p>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경우</p> <p>23.~26. (생략)</p> <p>제40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10. (생략)</p> | <p>〈법률〉</p> <p>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p> <p>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20. (현행과 같음)</p> <p>2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p> <p>2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p> <p>23.~26. (현행과 같음)</p> <p>제40조(과태료)</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10.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11.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p> <p>12.~14. (생략)</p> <p>〈시행령〉</p>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h>1차</th><th>2차</th><th>3차 이상</th></tr><tr><td>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td><td>법 제40조제1항제11호</td><td>50만원</td><td>100만원</td><td>200만원</td></tr></table>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p>11. 제22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p> <p>12.~14. (현행과 같음)</p> <p>〈시행령〉</p>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th></tr><tr><th>1차</th><th>2차</th><th>3차 이상</th></tr><tr><td>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td><td>법 제40조제1항제11호</td><td>()만원</td><td>()만원</td><td>()만원</td></tr></table> <p>※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내</p>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이상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 ()만원 | ()만원 | ()만원 |
| 위반행위 | |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 | 2차 | | 3차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 ()만원 | ()만원 | ()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p>〈시행규칙〉</p>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r><td>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td><td>법 제9조</td><td>경고</td><td>영업정지 1개월</td><td>등록취소</td></tr></table>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p>〈시행규칙〉</p> <table><tr><th rowspan="2">위반 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th><th>2차</th><th>3차</th></tr><tr><td>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td><td>법 제9조</td><td>영업정지 ()개월</td><td>영업정지 ()개월</td><td>영업정지 ()개월</td></tr></table> <p>※ 위반 횟수에 따라 4개월 이내</p>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개월 | 영업정지 ()개월 | 영업정지 ()개월 |
| 위반행위 | |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 | 2차 | | 3차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차 | 2차 | 3차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발주자에게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개월 | 영업정지 ()개월 | 영업정지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04 하도급계약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 통제장치 마련

■ 평가대상

-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③ 자치법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별표10〉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
| 2.9 |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
| | –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 –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
| | –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1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③ (생략)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발주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급 이상의 임직원을 말한다)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자치법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정 없음.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임 · 위탁기준의 적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현황

- 감리원은 「건설법」·「건설법」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 계약의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
 - 계약 자료를 감리원에게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며,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 등의 책무를 감리원에게 위임
-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의 보호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건설법」 '11.11.25. 시행)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가(내부+외부) 등으로 구성하여 발주기관 별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
 - 수급인 등이 제출한 하도급계약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적합하거나 법정 하도급비율(82%)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설정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

문제점

- 발주기관은 감리원에게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부실검토 감리원에 대한 감독 규정 미흡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공사업무(사업부서)와 계약업무(계약 부서)의 이원화된 관리시스템으로 하도급계약 타당성 검토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
 - 감리원이 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형식적 타당성 검토로 적격심사 시 제출된 하도급계획과 실제 계약내역이 대부분 변경되었고, 적정 하도급 비율에 못 미치는 계약에 대하여도 하도급을 인정하는 결과 초래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법령 ·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심사제도의 실효성 저하
 - 건설법령에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2011.11.25.시행)하도록 규정
- 또한, 현행 심사기준의 불합리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비율(82%)보다 낮은 저가 하도급이 가능
 - 수급인의 저가 하도급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하도급계약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있으나,
 - 명확한 기준 설정과 절차 없이 발주기관에 권한만 주어지고 의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저가 하도급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 하도급계약 타당성 등에 대한 부실검토 · 관리 감리원의 별점부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
 - 발주기관의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 받아 하도급계약 등을 관리하고 있는 감리원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명확한 책임 부여를 위해 감리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발주기관의 통제권 강화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실효성 확보장치 마련
 - 발주기관 별로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설치 ·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설치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공정·투명성 확보와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위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
- ▶ 적정성 심사의 실효성 확보와 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①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확대·강화 규정, ②위원에 이해충돌 방지장치 규정, ③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체 심사기준, ④심사결과 공개 규정(가이드라인 제10조 참조)은 필수적으로 마련

예 시

| 현 행 | | | 개 정(안) | |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 |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별점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별점 |
| 2.9 |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 |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
| | -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 -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 | -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
| | -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1 | 2.9 | 하도급관련 제출서류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 2 |
| | | | | -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
| | | | | 하도급관련 제출서류 검토 부실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
| | | | | -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1 |

| 현 행 | 개 정(안) |
|---|--|
|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 <p>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p> <p>① ~ ③ (생략)</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 5. (생략)</p> <p>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p> <p>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신설〉</p> |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 <p>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각각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⑦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p> <p>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⑪ 제4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p> |



| 현행 | 개정(안) |
|---------------------------------|---|
| <p>〈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조례〉 〈신설〉</p> | <p>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p> <p>〈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조례〉 제○조(기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100분의 82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다만,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85점 미만이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현 행 | 개 정(안) |
|-----|---|
| | <p>제○조(위원의 제척 등)</p> <p>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 자문 · 설계 ·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 자문 · 설계 ·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p> <p>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p> <p>제○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일반에게 공개한다.</p>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강화
2. 기금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01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관리강화

■ 평가대상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0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용자
4. 그 밖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제00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황

- 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재정용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례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영

— '11년 말 기준, 78개 단체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영 중(광역시 16, 기초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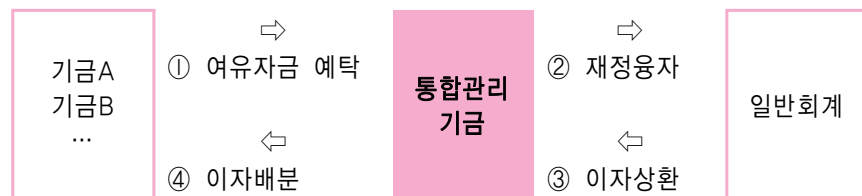
※ 예시) 서울(재정투융자기금), 경기(통합관리기금), 경남(통합관리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재정용자 시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주로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이자를 상환받고 개별기금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



문 제 점

-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용자 규모 과다
 - 일부 광역지자체는 기금 전체 조성규모 대비 절반 이상을 융자하고 있어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기반 저해 우려
- ※ 인천(75.1%), 대구(66.7%), 부산(59.3%), 광주(54.2%)는 각 지자체별 전체 기금 조성규모 대비 일반회계 융자비율이 50%를 초과('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11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 기금조성 총액 (A) | 일반회계 용자 금액(B) | 기금조성 총액 대비 용자비율(B/A) |
|-------|----------------|------------------|-------------------------|
| 인천광역시 | 245,929,037 | 184,766,669 | 75.1% |
| 대구광역시 | 176,974,213 | 118,000,000 | 66.7% |
| 부산광역시 | 773,631,552 | 458,942,300 | 59.3% |
| 광주광역시 | 94,088,562 | 51,000,000 | 54.2% |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재정용자 시 용자대상의 적정성 · 상환 가능성 등 재정용자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 미비

※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된 7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전광역시만 조례 시행규칙에서 용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상환가능성 등을 사전에 예산부서에서 심사토록 규정(‘12.8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재정용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재정용자 규모 적정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 재정용자 시 타당성 검토 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



예 시 1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0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 4. (생략) (신 설) | 제00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①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용자 규모가 제2항에 비추어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예 시 2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제0조(용자기준)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02 기금 보조사업의 재정지원 및 집행·관리 강화

■ 평가대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②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제

③ 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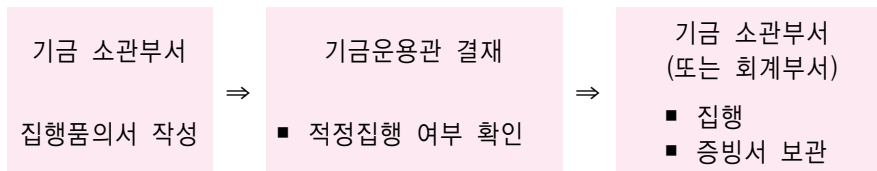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②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00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 3. (생략)

평가기준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황

-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크게 사업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 기금 세 가지로 구분

– 그 중 사업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자금을 관리·운용

※ 예시) 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 주로 사업관리기금에서 민간경상보조 등을 통한 보조사업 수행

※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민간보조금(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지출 내역이 있는 기금 수는 657개 (33.8%)

문제점

- 일반회계와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

– 특정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기금재원이 회계간 구분 없이 동일·유사 보조사업으로 지출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기금추진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규정

- 기금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기준 미비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과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의 준용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보조금 집행·관리 미흡

※ 국가보조사업의 경우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기금보조사업 역시 예산집행지침의 보조사업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규정

※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기금 수는 458개(23.6%)

〈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금 관련 규정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민간이전경비 | 보조금 관리 조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보조사업 일몰제(3년) 적용 - 매년 정기적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 제재(교부중지, 반환명령) - 보조사업자 감독 - 보조사업 사업비정산 등 |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

- 사업부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유사·중복되는 일반회계 예산사업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심의회에 제출

※ 전라북도는 '12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를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별도 검토 수행('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기금 보조사업 집행·관리기준 마련

-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민간이전경비'를 준용토록 명시
- 보조금 관리조례의 기금보조금 적용 명시

※ 기금 보조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보조금관리조례 적용명시 필요('12.8월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전문가 자문결과)

예 시 1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②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기금운용계획 수립 흐름

□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개정(안)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절차 규정 마련〉

- 개별 기금운용관은 개별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이 가능함
- 기금운용계획 사전심의시 예산부서는 기금설치 목적사업외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필요성 여부를 판단, 예산편성 자제

③ 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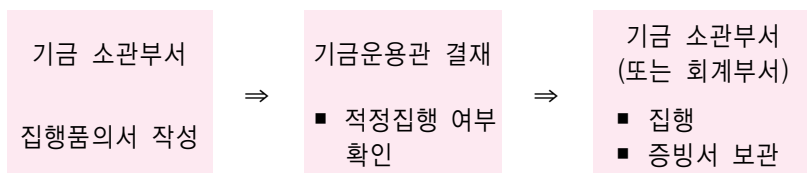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 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개정(안) <기금보조사업 관련내용 추가>

- 기금을 통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3 민간이전경비’를 준용하여 집행

예 시 2

보조금 관리 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제0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00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0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00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0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기금성과분석 등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문 제 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미흡

- 법정 의무절차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 미흡

※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12.9월) 대상 1,943개 기금 중 1회 이상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서면심의 포함)를 거친 기금 수는 1,582개(81.4%), 회의록을 작성한 기금 수는 903개(46.5%)

• 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흡

- 기금지원 사업 및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우려

※ 권익위 전국 지자체 실태조사 대상 1,943개 기금 중 제척규정을 마련한 기금 수는 98개(5%), 기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3개(1.7%), 회피규정 마련 기금 수는 36개(1.9%)

개선방안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마련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예 시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현 행 | 개정(안) |
|--|--|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 시 2

개별기금 설치조례

| 현 행 | 개정(안) |
|-------|---|
| (신 설) | 제0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 3 절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투명성제고

1. 보조사업자 선정·지원 과정의 합리적 기준·절차 마련
2.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자율통제기능 강화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01 보조사업자 선정 · 지원 과정의 합리적 기준 · 절차 마련

■ 평가대상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 ·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중 략)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보조금 관리 조례

제0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 황

- 지방자치단체 민간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 · 운영하여 보조사업 교부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 조례에 보조사업 신청시 제출자료, 검토사항, 교부조건, 통지절차 등을 규정

문 제 점

가.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없이 자치단체장 방침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심의위원회 등 외부 타당성 검증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등 5개소(2%)에 불과
 - 반면, 기관내부 검토 후 자치단체장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88개(77%) 기관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
- 객관적인 선정절차 없이 운영한다면 특정 단체·개인을 위한 자의적인 선정, 부실사업자에 대한 관행적 계속지원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해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법률에 규정하나,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법간 형평성 제고 필요

나.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부패요인 내재

- 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시 자치단체의 부담률(최대 보조한도 등)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 213개(87%) 지자체는 사업별 보조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없이 운영하고 있어, 행정편의 등으로 보조율을 수시로 조정·결정할 소지
- 특정단체·개인의 사업별 최대 보조한도 및 자부담률을 무분별하게 조정·적용하여 자의적 예산 편성 등 부패발생 요인 내재

다. 편중지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 규정 부재

- 특정단체에게 보조금의 편중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제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거나, 지원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필요
- 그러나, 244개 지자체 가운데 208개(85.2%)는 유사·중복사업을 여과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자치법규 또는 개별시책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않음

※ 244개 지자체 가운데 기초단체 5개(2%)만이 조례로 규정하여 동일목적 또는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으면 신규 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조례 반영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토록 근거 마련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사업 등은 조례를 통해 규정토록 위임
- 사업별·유형별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한도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설정하여 지원토록 명시
- 사업별·유형별 ‘기준 보조율’, 제외대상 사업 등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토록 조례에 위임

-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사업신청시 검증 강화

– 자치단체별 조례로 유사·중복사업 관리제도를 마련토록 위임

※ 예시 : 일정기간내 동일사업 신청시 배제, 보조금 신청시 지원이력 등의 제출 의무화 등

예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현 행 | 개정(안) |
|---|--|
|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생 략〉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p>〈조항 삭제〉</p> <p>제29조의 1(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용 부담능력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무분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사목적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 신청시 검증하여야 한다.</p>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02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자율통제기능 강화

■ 평가대상

①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 ·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 ·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생 략〉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생 략〉

② 공동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 · 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

현황

-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가 매년 8월 지방재정내역을 공시
 - 민간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사업을 집행내역을 ‘주민공시 필요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문제점

- 지방재정 공시사항에는 민간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의 단순정보 제공으로 지원단체 등 세부 지원내역 파악 곤란
 -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단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나, 재정공시 항목에는 누락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은 공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조금 사업 전반의 지원내역 확인 불가
-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의 자치단체(189개, 78%)가 재정공시 사항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알권리, 정보접근성 제약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 보조사업자를 포함한 보조금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 지역언론 등을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

예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현행 | 개정(안) |
|---------|---|
| 〈조문 신설〉 | 제29조의 2(보조사업 내역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내역(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을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0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평가대상

①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중 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관리조례

제00조(보조사업자의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현황

-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위반행위시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제재 규정을 통해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급중지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가. 제재규정의 조례에 위임으로 인한 형평성·실효성 저조

- 위반행위시 제재사항을 개별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미흡

- 허위 또는 부정한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나, 경북 구미시 등 17개 자치단체의 조례는 관련 규정 없음

※ 아울러, 보조금 환수 등 제재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 필요

- 제재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도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시 제재사항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미흡

- 자치법규상의 근거불비와 강제성 없는 제재규정으로 인해 보조금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여도 환수가 곤란, 재량의 남용 가능성 상존

※ 222개(91%) 지자체가 위반행위시 제재사항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고,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한 지자체는 경남 거제시 등 4개 기관(1.6%)에 불과

- 반면, 국고보조사업은 법률에 제재규정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환수 등을 의무화

- 지자체 민간보조금의 경우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등 중대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환수 사유로 규정 필요

나. 위반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 등 법령상 여과장치 부족

-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개인·단체가 유사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재차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참여제한 등 제재 필요
 - 그러나,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 배제를 명문화한 기초단체는 9개(4%) 기관에 불과
 - 위반행위 시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부만 운영하는 지자체는 234개(96%) 기관으로 다수

다. 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에 대한 미온적 제재

- 자치법규에 규정된 위반행위 시 제재수단이 보조금 교부정지 및 반환 등으로 한정되어 제재가 다양하지 못함
- 반면, 최근 국가R&D 사업 등 예산횡령·유용 등이 빈발하고 있는 분야의 법률에서는 유용금액에서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 횡령 등에 대한 부가금 부과 규정 법령 〉

| 구 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공무원법 외 10개 법령 |
|------|---|---------------------------------|
| 부과대상 | 연구원이 연구개발비의 연구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할 경우 |
| 부과방법 |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징수 |

- 보조금의 횡령·유용사건이 지속적으로 빈발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재발방지 및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도입 필요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 개정 〉

- 위반행위시 보조금 교부중지 및 환수 등의 제재사항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토록 개선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 당연 교부중지 및 환수 사유로 의무화(강행규정)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등의 비위 보조사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그 지급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예 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 현 행 | 개정(안) |
|---------|--|
| 〈조문 신설〉 | 제00조(보조사업자의 제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고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목적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때 |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6.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0년 동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 제5호의 후단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부정한 사용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0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제 4 절

각급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제고

■ 평가대상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부처 소관 34개 대통령령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특정 이해관계로 인한 왜곡된 의사결정 등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저해

개선방안

- 위원회 구성 시 참석 **위원의 이해충돌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도입
- 「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위원회를 기능에 따라 3개 유형(분쟁조정, 인·허가, 개발구역지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부처에 배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괄정비 도모



개선결과

- 34개 대통령령 모두 우리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장치 규정

〈 부처별 일괄정비 대상 법령 및 위원회 〉

| 소관 부처 | 관 계 법 령 | 위 원 회 명 |
|----------|--|-----------------------------|
| 교과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사위 원회 |
|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 인정기관심의위원회 |
| | 대학설립운영규정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
| | 사립학교법 시행령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
| | 학교보건법 시행령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 문광부 | 저작권법 시행령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 지경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 가스사고조사위원회 |
|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부품소재발전위원회 |
|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 행령 |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
| 복지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안전성평 가자료심사위원회 |
| 국토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 | |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 | 건축법 시행령 | 중앙건축위원회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교통신기술심사위원회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 도시개발위원회 |

| | | |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
|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
|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 |
|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 연안관리법 시행령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
| | 주택법 시행령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앙지적위원회 |
|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 | 하천법 시행령 | 중앙하천관리위원회 |
| | 항만법 시행령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
| 원자력 안전위 |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
| 특허청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
| | 변리사법 시행령 | 변리사징계위원회 |